

# 보도해명자료

KDI 홍보팀 958-4030 press@kdi.re.kr

2012. 5. 25.

## 제 목: 한국경제신문 5월 25일 「녹색 일자리에 관한 KDI의 이상한 계산」 제하 사실 관련 해명

한국경제신문은 5월 25일자 「녹색 일자리에 관한 KDI의 이상한 계산」 제하 사실에서 KDI의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따른 일자리 창출 성과 분석』에 대해 “녹색투자의 필요성을 주장하기에는 너무나도 빈약한 분석 결과”라면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꿰맞춘 것은 아닌지”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이는 분석내용에 대한 일부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기에 KDI의 입장을 밝혀 드리오니 향후 관련 보도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 창출 성과분석 전반부의 녹색성장 재정사업의 직접 참여 인원 분석 결과의 한계에 관하여는 KDI 분석에서도 이미 한계로 지적하고 있는 바임.
- 녹색성장 재정사업에 직접 참여한 인원 54.2만 명 중 상당수는 기존인력을 전환배치한 인원이지만 신규인원도 15.6만 명으로 추정되어 사업기간 중에 재정투자로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임.

○ 사설의 지적대로 사업완료 후에 사업 참여인원의 고용이 유지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은 KDI분석에서도 한계로 지적, 이러한 문제점으로부터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음.

- 연구계획 단계에서는 재정투입 단위사업 참여인원의 근로자 특성(성, 학력, 연령, 풀타임/파트타임, 정규직/비정규직, 직종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일자리 지속성, 고용의 질 등에 관해서도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자료의 제약 상 분석에 포함시킬 수 없었음.

□ 그러나 후반부의 고용효과 분석에 대한 사설의 지적은 '녹색일자리'라기 보다는 녹색산업부문의 효과를 말하고 있는 KDI의 분석 방법과 결과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 것임.

○ KDI의 연구에서는 정부의 녹색성장 5개년계획에 포함되는 재정투자사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했음.

○ 개별사업들이 실행되는 산업분야로 설정한 녹색산업 내에서 녹색일자리와 비녹색일자리가 혼재할 수 있으나 자료 제약으로 구분하지 못했음.

□ 또한 사설은 KDI의 고용효과 분석이 "이는 토지 건물 등에 대한 보상비를 빼고 계산한 것이어서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으나 보상비를 포함했을 경우 오히려 고용유발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과 다름.

○ 소유권이 민간에서 정부로 이전되는 성격이 강한 보상비(약 3조원)의 경우 생산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는데, 보상비를 포함해 과급효과를 계산할 경우 재정투입 규모가 커져 고용유발효과가 오히려 증가할 것임.

○ 다만 691개 전체 사업 가운데 보상비 내역이 일부 누락되었을 수 있다는 점에서 KDI의 분석효과가 다소 과대 추정되었을 수는 있으나, 보상비 미확인 사업이 많지 않아 그 정도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KDI는 실증적 관점에 입각해 분석자료를 토대로 최대한 합리적인 분석방법을 적용해 분석을 수행했으며, 따라서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꺾 맞추”거나 작위적으로 부풀린 바가 전혀 없음을 밝힘.

**※문의: 황수경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02-958-4107)  
윤윤규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02-3775-5558)**